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8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2. 9. (제3차)

의
결
사
항

에스케이(주)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
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2. 2. 9.

1. 의결주문

- ☐ 에스케이(주)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☐ 2021.1.26.부터 에스케이(주) 등 939개사 주식 등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※ 2020.3.16.(공매도 금지조치 초일)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점검과정에서
◆◆◆◆◆의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

3. 주요골자

- ☐ 공매도 제한 위반

○ 과태료 부과 (10억원) : ◆◆◆◆◆ [금융투자업자]

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 붙임 1 >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 제1항 제39호, 제180조 제1항

(별지)

◆◆◆◆◆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◆◆◆◆◆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(과태료), 동법 시행령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「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」 제26조(과태료의 부과), 제48조(준용규정), 부칙 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및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에 의하여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한다.

☐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◆◆◆◆◆ [금융투자업자]

- 주 소 : ♠♠♠♠♠♠♠♠

☐ 조치이유

○ 공매도 제한 위반

- ◆◆◆◆◆은 2017.2.2.~2020.5.18. 기간 중 SK(주)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1억 4,089만주(5조 9,504억원)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

관 계 법 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80조 (공매도의 제한)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서 상장증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(이하 "공매도"라 한다)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(이하 "차입공매도"라 한다)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
2.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

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
2. 전환사채 · 교환사채 ·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, 유 · 무상증자,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
3.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생략

제449조 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8. 생략

39.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

40. ~ 49. 생략

② ~ ③ 생략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· 징수한다.

⑤ ~ ⑥ 생략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08조(공매도의 제한)

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(이하 “차입공매도”라 한다)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(이하 “증권시장업무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<별표 22> 과태료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스.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39호	6,000
으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39호	3,000

□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제26조(과태료의 부과)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·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(2020.1.16. 신설)

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48조(준용규정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7.14.>

1.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(2020.1.16. 삭제)
- 2.~3. 생략

부칙 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(2020.1.16. 신설)

□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<별표 3> 과태료 부과기준

- 1.~2. 생략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나. 감경 사유

- (5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(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)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0, 2017.10.19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조사단	자본시장조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8	02-3145-5636